

민주 내부서 '1특검·4국조' 부정 기류... "선택과 집중 필요"

특검·국조 모두 여당과 합의 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석열 정부서 진행된 사례 이태원 참사 국조가 유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외 공세에 나섰다.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병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선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안 줄여 특검 또는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 추진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한다.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나고 경찰로 이첩될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고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면서 생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 시시비비와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6일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1특검·4국조 총괄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부친상을 감안해 순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1특검·4국조'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협조 없이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진행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특검 추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특검은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별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실제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일하다.

여당은 민주당의 '1특검·4국조'에 대해 정략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기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듯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 정쟁들을 모아 1특검, 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



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도 있었다"며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다들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 정리가 되는 시일이 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당과 합의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는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중인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김철민·민덕희 여수시의원 "지역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여수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7일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철민·민덕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려 시의원, 여수교육재단, 여수민관산학 교육참여위원회, 여수학부모연합회, 여수학부모자치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 발제자로는 여수교육재단 정재

천 사무총장, UNIST(울산과학기술원) 이규성 학생이 나섰다.

여수교육재단 정재천 사무총장은 진로·진학지도의 방향과 혁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여수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민관산학 교육협력 체계 구축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을 위해 전라적인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UNIST에 진학한 이규성 학생이 '여수 시 고등학생 진학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

다. 이규성 학생은 여수시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 고등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기록부 관리 방법 교육, 면접 분위기 조성, 교육 물품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제 후에는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학부모들은 주로 관내 중학교→고등학교 진학 관련 지원, 진로 탐색 기회 확대 등을 여수시가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민덕희 의원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현실적이고 경쟁력있는 중장기 교육의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시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여수시가 교육 정책의 내실을 더 강화한다면 시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찾는 학생, 학부모가 더 많아지고 각 학교들의 협조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민주 "김철, 쌍방울-이재명 대표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 극에 달해"

"김성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쪽 빼고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김철의 김성태 봐주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특별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작성된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

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1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쪽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검찰에 촉구한다.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대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며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